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
<목 차>

1.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 삭제
2. 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규정 개선
3. 문주 등의 설치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 삭제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작성 자	이름	양승진
	담당부서 (과)	주택건설공급과		직급	시설주사
	국장	이문기		연락처	044-201-3370
	과장	서정호		이메일	ysj1027@molit.go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 및 제27조제4항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주체 및 인허가권자				
5. 규제존속기한	미설정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사업계획승인대상인 ‘주택’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‘노유자시설’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완화적용되던 규정 삭제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height: 20px; width: 100%;"></div>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배치, 공장·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의 이격, 관리사무소 설치 규정 적용
-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완화 규정 삭제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적용의 특례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·제34조·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⑨ ~ ⑪ (생략)</p>	<p>제7조(적용의 특례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⑨ ~ ⑪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주차장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.3대(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.2대)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	<p>제27조(주차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「노인복지법」에 노인복지주택제도를 도입('89.12)한 이후,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신설하여 분양 허용('98.5)
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사무소,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·복리시설 설치를 면제('98.8)
 - 노인복지주택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하고, 설치·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주택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('99.2)
- 법체계상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노유자시설인 '노인복지주택'이 포함되는 부적절
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적용범위(제3조)는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,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으로 정하고 있으나,
 - 동 규정에 적용대상이 아닌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이를 개정할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「주택건설기준」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관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사업주체 및 인허가권자의 업무 혼선을 방지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노인복지주택 건설 관련 기준 완화 >

○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리사무소, 가스공급시설, 유치원,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

○ 또한, 주차장 설치 시 세대당 주차대수를 일반주택(1대)에 비하여 0.3대(전용면적 60㎡ 이하인 경우 0.2대)로 완화

< 비규제대안 : 「노인복지법」 개정 >

○ 법체계상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일부 완화 적용받는 규정에 대하여 「노인복지법」 개정을 통해 해소 가능

– 「주택법」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「노인복지법」에서 현재 완화 적용받는 조항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경우, 현재의 완화규정을 그대로 적용 가능

< 규제대안 1 : 해당없음 >

○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, 다른 규제 대안은 없음

< 규제대안 2 : >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해당사항 없음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적용범위에 적합하도록 ‘노유자시설’인 노인복지주택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, 민간의 자율적 규제 또는 시장유인적 규제로는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

< 해외사례 분석 >

- 해당사항 없음

< 타법사례 분석 >

- 해당사항 없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- 「노인복지법」 제55조제2항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및 제11호나목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,
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

-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건축법」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「주택건설기준」에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규정을 존치할 경우,
 -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을 적용범위로 하는 「주택건설기준」의 법체계상 맞지 않아 사업주체 및 인허가권자의 업무에 혼란 초래

< 결론 >
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규정을 존치할 경우, 관련 법령 간 일관성 확보 곤란과 사업주체 및 인허가권자의 업무에 혼란이 우려되며,
 -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체계상 필수적인 개정
- 기존 완화규정에 대한 사항은 「주택법」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「노인복지법」의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, 법체계상도 타당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6	2016	10	5.5	백만원, 현재가치

현행유지안 : 노인복지주택 건설 관련 기준 완화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규제대안 1 : 해당없음

영향집단		비용		편익		순비용	
		총 (현행 포함)	증감 (대안1-현행)	총	증감	총	증감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			
	간접			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			
정부							
총 합계							
기업순비용				연간균등순비용			

규제대안 2 :

영향집단		비용		편익		순비용	
		총 (현행 포함)	증감 (대안2-현행)	총	증감	총	증감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			
	간접						

피규제 일반국민		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		
정부						
총 합계		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	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현행유지안 : 노인복지주택 건설 관련 기준 완화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정성적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건축법」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「주택건설기준」에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규정을 존치할 경우, 관련 법령 간에 일관성이 없고, - 사업주체 및 인허가권자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편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
--------	---

<규제대안 1 : 해당없음>

정성적 분석	○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,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
--------	--

<규제대안 2 : >

정성적 분석	○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,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
--------	--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「주택건설기준」에서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규정만 삭제함으로써 적용 기준만 달라지는 것으로, 현행 행정·인력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함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「주택건설기준」에서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현행 「건축법」 등을 적용하여 집행이 가능함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- 「주택건설기준」에서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규정만 삭제하는 것으로, 지자체는 현행 건축허가 담당 인력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함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해당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-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와 해당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- 대안 분석 결과,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「주택건설기준」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- 선호된 대안 없음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- 선호된 대안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규정 개선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작성 자	이름	양승진
	담당부서 (과)	주택건설공급과		직급	주무관
	국장	이문기		연락처	044-201-3370
	과장	서정호		이메일	ysj1027@molit.go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 및 제25조제5항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주체 및 입주자				
5. 규제존속기한	미설정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독신자, 독거노인, 학생 등 1~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“도시형 생활주택” 제도 도입('09.5)
 -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「주택건설기준」 중 소음, 배치, 기준척도 등에 관한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,
 - 필요성이 낮은 부대·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하며, 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완화
- '15.1월 의정부 주상복합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도적 문제점 존재
 - 대지확보를 위하여 완화한 배치 규정 중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며, 공장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규정도 완화
 - 관리사무소는 의무관리대상*인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, 연면적 660㎡ 이하인 원룸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을 4m로 완화하여 화재발생 시 대처 및 소방차 진입 등에 애로

* 300세대 이상,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,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적용하는 완화 기준을 보완하여 방화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고, 공장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이격하며,
-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 및 진입도로 확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완화 >

○ 현행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방차 접근을 고려한 배치, 위험시설과의 이격 거리, 관리사무소 설치 및 진입도로 확보에 있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

-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쉬울 수 있으며, 화재 발생 시 대처 및 피해 확산 방지에 취약

< 비규제대안 : 해당없음 >

○ 현행 법령 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 제외 또는 예외로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 강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므로 비규제로서의 대안은 없음

< 규제대안 1 : 해당없음 >

○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,

- 일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동일 종류의 주택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할 명분이 없으므로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

< 규제대안 2 : >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해당사항 없음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령 상 완화된 규정을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,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을 기대하기는 곤란

< 해외사례 분석 >

- 해당사항 없음

< 타법사례 분석 >

- 「소방시설법」에서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 - 이와 연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방훈련과 안전관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

< 위임근거 검토 >

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르면 주택의 배치, 부대시설의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동 규제는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음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

동 규제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

-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기존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소방차 접근을 고려한 배치, 위험시설과의 이격 거리, 관리사무소 설치 및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화재 등 위험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가 곤란

< 결론 >

-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과 관련한 「주택건설기준」을 현행과 같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, 화재 발생 시 대처 곤란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며,
 -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동일 종류의 주택에 대해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,
-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완화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6	2016	10	5.5	백만원, 현재가치

현행유지안 :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완화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규제대안 1 : 해당없음

영향집단		비용		편익		순비용	
		총 (현행 포함)	증감 (대안1-현행)	총	증감	총	증감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			
	간접			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			
정부							
총 합계							
기업순비용				연간균등순비용			

규제대안 2 :

영향집단		비용		편익		순비용	
		총 (현행 포함)	증감 (대안2-현행)	총	증감	총	증감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			
	간접						

피규제 일반국민		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		
정부						
총 합계		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	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현행유지안 :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완화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정성적 분석	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과 관련한 「주택건설기준」을 현행과 같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, 화재 발생 시 대처 곤란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등 편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
--------	--

<규제대안 1 : 해당없음>

정성적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, - 일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동일 종류의 주택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할 명분이 없으므로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
--------	--

<규제대안 2 : >

정성적 분석	
--------	--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「주택건설기준」의 적용 규정만 달라지는 것으로 현행 행정·인력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함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집행이 가능함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-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「주택건설기준」의 적용 규정만 달라지는 것으로 지자체는 현행 사업계획승인 담당 인력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함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관련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-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와 관련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- 대안 분석 결과,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, 동일한 종류의 주택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명분이 없으므로 개정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- 선호된 대안 없음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- 선호된 대안 없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문주 등의 설치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작성 자	이름	민경철
	담당부서 (과)	주택건설공급과		직급	
	국장	이문기		연락처	044-201-3366
	과장	서정호		이메일	pepsy@molit.go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주택건설회사				
5. 규제존속기한	화재 발생시 신속한 구조, 소화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가 화재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규제존속기한 설정 불필요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신설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동주택의 배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<u>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0조(공동주택의 배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하며,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국민안전처에서 '15.10.1. ~10.30.까지 일부단지에 대해 단지내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,
 - 문주로 인해 소방자동차 진입이 불가하고, 우회로도 없어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부 아파트가 존재
- 소방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의 어려움으로 큰 피해 발생 가능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소방자동차가 아파트 단지 내 화재현장에 신속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통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주, 차단기,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- (목표)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현장에 소방자동차가 신속한 접근 도모
- (기대효과) 신속한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통해 인명·재산상 피해 최소화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현 규정 >

○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자동차의 통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, 소방자동차의 진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문주 또는 차단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

- 설계, 공사 또는 인허가 시 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

< 비규제대안 : 지침, 권고 등 행정조치 >

○ 행정관청에서 인허가시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주, 차단기 등에 대해 크기 변경 또는 위치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,

-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

< 규제대안 1 : 법령 개정 >

○ 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 시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,

- 이를 근거로 소방방재청에서도 해당 단지에 대한 소방계획을 면밀히 검토

< 규제대안 2 : >

해당 없음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, 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시에만 적용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,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과 관련 사항은 민간의 자율성,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곤란

< 해외사례 분석 >

< 타법사례 분석 >

- 공동주택 단지내 소방자동차 진입과 관련해서는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

< 위임근거 검토 >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중앙소방본부에서 주택단지 진입로에 문주, 차단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규정 개정 건의('15.12.17)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기존 규제로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주 또는 차단기 등 설치를 제한하기는 한계

< 결론 >

-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현장으로 소방자동차

차가 신속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
주, 차단기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강제성을
부여함이 바람직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6	2016	0	0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 1 : 법령 개정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94		94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94		94
기업순비용		94	연간균등순비용	

규제대안 2 :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 1 : 법령 개정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직접비용 : 94백만

업무제목	문주, 차단기 또는 필로티에 소방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높이 및 폭으로 설치
설명	○ 소방자동차 통과를 위해 문주의 높이를 50cm 정도 올릴 경우 4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○ 차단기는 설치위치를 조정경하면 가능하므로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음 ○ 소방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이 가능한 필로티 높이를 증가(마감천정고 3.0m → 4.5m)하는 경우 90백만원 추가비용 발생
세분류	주택건설업체
활동제목	문주 또는 필로티 설치
비용항목	원재료
비용	94,000,000
활동비용 특성	일시적

간접편익 : 백만

(정량)제목	
금액	

(정성)제목	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
분석	문주 또는 필로티 높이를 상향하는 목적이 화재현장으로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신속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

정성적 분석	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임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<규제대안 2 : >

정성적 분석	
--------	--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< 경쟁영향평가 >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- 화재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, 주택업계,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도 수용하는 입장